

일부 언론의 ‘KT노동조합 선거 부정의혹’ 보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KT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5일자 한겨레신문의 [KT노동조합 선거, 또 ‘부정’ 얼룩지나] 기사 내용이 일부 후보 캠프 쪽의 주장을 편향, 왜곡 보도했다고 판단, KT 전체의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힌다. 이와 함께, 일부 후보캠프가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이며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언론사 또한 공정보도원칙을 직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투 개표소 논란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KT노동조합 11대 위원장 선거 투 개표소가 2008년 노조 위원장 선거 때보다 209곳 늘어난 698곳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용하며, 일부 후보캠프의 회사개입 의혹 입장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무선통합을 앞두고 실시된 2009년 조직개편 이후의 KT 전국사업장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억측일 뿐이다. 현재 KT는 비슷한 업무로 구성된 지부라고 해도, 지부별로 효율적인 고객응대를 위해 조합원을 고루 배치, 업무의 형평성을 높였다.

따라서, 노동조합 선거일이 평일임을 감안하여 민원해결 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투 개표소를 설치토록 한 것 일뿐, 어떠한 목적도 의도도 있을 수 없다.

둘째, 참관인 자격 제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과 선관위지침에 의거 ‘투 개표 참관인을 해당 지역본부 소속으로 제한한 것’은 투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얼굴도 모르는 참관인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조하는 작업이 투표 당일 조합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운동 제한

본 위원회는 후보간 정정당당한 경쟁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8일, 각 후보진영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현 선거관리규정 및 지침에서 인터넷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현장의 바쁜 업무를 고려할 것이고, 각 후보진영은 이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에 기사를 제보한 후보 측은 사내메일과 SMS 통한 선거운동을 이어갔으며, 이에 선관위는 18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고 주의,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해당 후보 측이 이미 규정과 지침을 어겨놓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다.

넷째, 언론의 공정정보도 요청

2만5천 조합원의 큰 잔치인 KT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5일도 남지 않았다. 본 위원회는 그 동안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노동조합 규약규정과 선거지침에 의거, 각 후보진영간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불필요한 과열양상을 막기 위해 힘써왔다. 또한, ▲사측의 지배개입 ▲불법유인물 배포 및 근거 없는 비방 ▲외부세력 동원 등을 금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를 엄수할 것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일부 후보 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일부 언론이 KT 관련 각종 사례들을 모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선거에 접목하는 행위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 같은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진영에 의한 왜곡보도가 이어질 경우, 후보는 물론 해당 언론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26일

KT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